

사회 전반 청렴문화 정착...농어민·자영업자 눈물

김영란법 시행 1년의 변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오는 28일로 1년을 맞는다. 김영란법은 시행된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 89%가 '효과 있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청렴 인식은 향상됐다.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들이 들고 오던 박카스나 비타500은 아예 볼 수 없고, 청탁과 접대가 일상이었던 공직사회는 더치페이 문화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비싼 식당에 가지 않는 건 당연해졌다. 행어나 오해를 살지 모르는 탓이다. 교직사회는 촛불 문화가 근절됐다. 스승의날 카네이션조차 선물할 수 없을 정도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성과다.

그러나 선물 문화가 사라지면서 농축수산물 농가와 화훼농가, 음식점,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 품목과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할 정도로 변화 폭이 크다. 자칫 실업자를 대규모로 양산할 수 있을 정도로 위기다. 이는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과제다.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많지 않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올해 5건 접수돼 2건은 각하되고 3건은 수사 중이다. 광주경찰청도 총 5건을 접수받아 1건은 불기소, 3건은 반려 처분했다. 나머지 1건은 수사 중이다. 전남경찰청은 신고 접수는 없었고, 다만 3건의 상담만 있었다. 그만큼 김영란법 정착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25일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에는 추석 대목을 맞아 업체들이 선물용으로 팔기 위해 내놓은 굴비들이 죽 내걸려 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kwangju.co.kr

'3·5·10 규정' 어떻게?

권익위, 오늘 김영란법 1년 토론회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28일로 1주년을 맞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성과와 향후 개선책 등을 짚어보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이고, 한국행정연구원은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주한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이다.

25일 권익위에 따르면 박은경 권익위원장도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이어 기조발제와 관련 토론이 이어진다.

박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청탁금지법 1주년을 맞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외식업체·화훼농가·농어민은 물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 그리고 정치권이 앞장서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박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시행령이 허용하는 기준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이를 '3·5·10만원 규정'으로 부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직사회

처벌 사례 없어 느슨해진 분위기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각성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공무원의 직무 관련 청탁을 금지하는 법령과 규정이 있었고, 기관별로 이를 감시하는 체계도 갖춰져 있었지만 김영란법을 통해 '정탁'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떠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만남'을 '거절'할 수 있는 사회적인 명분이 생겼다는 점도 반겼다. 광주시청 한 관계자는 "많은 민원과 청탁이 지연과 학연 등을 토대로 이뤄지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를 거절하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돈 버는 자리'였던 관가 인근의 식당가 풍경에도 변화가 생겼다. 공무원들이 즐겨 찾던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한 계절음식점 접주는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3만원 미만의 메뉴를 만들었지만 공무원들의 회식 등이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청 한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처벌을 강조하기보다는 '법을 지키겠다'는 문화를 먼저 자리 잡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교육계·학부모

음료·화환·간식 문화 사라져

광주 모 장학회 이사장 A씨는 지난 5월 19일 동부교육청 B주무관 집에 현금 300만원과 양주 1병 등 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놓고 갔다. 곧바로 A씨에게 금품을 찾아가도록 한 B주무관은 같은 달 22일 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한 뒤 A씨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부교육청은 이 장학회에 지난해 회계 결산자료를 요구했으나 A씨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시교육청과 도교육청에 관련법 위반 혐의로 신고접수된 건수는 1건이다.

지역 교육계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시행이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전엔 민원인·학부모·학생들이 음료수·화환·간식 등을 건네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후엔 이 같은 문화가 상당부분 근절됐다는 것이다. 공직자들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근절됐고,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다른 부서의 업무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관행도 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조직 문화가 삭막해졌다는 게 교육계의 공통된 견해다. 학부모들 사이에 선 관련법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하면서 과거 관행처럼 하지 않으면 혹여 자신의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기업

대기업은 성과·중기는 매출 감소

김영란법에 대해 대기업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기업 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이후 대기업 접대비는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대기업 홍보팀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저녁과 술 자리 횟수가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다만 규정 자체가 애매해 회계처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언론 등 관계자들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다보니 홍보 활동에 제약이 많다"고 전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평가는 사뭇 달랐다. 우선 법 시행 후 중소기업 절반 이상의 업체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업체들은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없이 버티는 수준이거나, 사업(매장·직업) 축소 등으로 대응하는 등 사실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컸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으며 또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되어야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농어민·상인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죠" 하소연

"지난 1년간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법안 취지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농축산업·화훼업·자영업·유통업계는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설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실적(주요 백화점·대형마트·소매유통업체 기준 4585억원)은 지난해 설 명절(5256억원)보다 14.4% 감소했다.

특히 국내산 농축산물 설 선물세트 판매액은 1242억원으로, 지난해 설과 비교하면 25.8%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과일 31%, 쇠고기 24.4%, 수산 19.8%, 가공식품 7.1% 순으로 줄었다. 화훼업계도 매출이 급감했다. 분화류의 가격은 지난해 대비 13.2% 줄었고, 난류도 24.3% 감소했다.

외식업계 생산·고용 지표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일반음식점 생산지수는 91.5와 86.4로 지난해 대비 각각 5.3%, 4.7% 하락했다. 한정식, 육류구이(특히 한우집), 일식·해산물전문 식당의 매출액도 각각 18%, 9.1%, 6.5% 가량 감소했다.

광주지역 1만6000여개의 일반음식점도 김영란법 시행 뒤 평균 34% 가량 매출이 떨어졌고, 일부 한정식·일식집도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영란법 현행 유지·강화" 41%

"농축산물 예외 두자" 25.6%

리얼미터 조사

국민 10명 중 4명은 시행 1년을 맞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을 시금처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2일 전국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포인트),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1.4%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 한 예외를 두자는 답변이 25.6%로 그 뒤를 이었고,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 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25.3%로 엇비슷했다.

이들 두 답변을 합치면 50%를 상회해 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사실상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65주년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요!

빈병보조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병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병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병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용량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수입산 제품에 적용	2017. 1. 1. 부터 출고되는 수입산 제품에 적용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조항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라미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주 등

면적 150% 확대 색상 변경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